# 與 '최순실 파문' 희석 안간힘…野 "민심의 분노 안 보이나"

#### '트럼프 쇼크' 정국 향방 주목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국내 정치권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.

그동안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던 '최 순실 국정농단' 파문이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예기 치 못한 변수에 의해 다소 희석되면서 정국의 이슈 가 '최순실과 트럼프'라는 두 가지 소재로 양분되는 듯한 분위기다.

무엇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제부터는 국정의 핵심 부분인 경제·외교·국방 분야만이라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려 힘쓰는 분위기다.

특히 여권은 '국정 컨트롤 타워'를 부재 상태로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 가 총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야권이 협조해 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.

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야 3 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추천 총리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"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조속 히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"고 말했다.

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"당· 청은 진정성을 갖고 국무총리 추천을 국회에 요구 한 만큼 이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에서도 진지하게 임해줬으면 좋겠다"며 책임 총리 추천을 위한 여야 대화를 촉구했다.

또 박 대통령은 야권의 '2선 후퇴' 요구에도 불구, 이날 외교 업무를 묵묵히 수행했다. 박 대통령은 이 날 우리나라를 국빈방문 중인 누르술탄 나자르바 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 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. 또 전날 국가안전보장 회의(NSC) 상임위로부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외교・안보・경제동향 등을 보고받았고, 트럼프 당 선인과도 통화했다.

그러나 이 같은 여권의 희망처럼 정국 상황이 변하

새누리 책임총리 추천·대화 촉구 박 대통령 정상회담 등 일정 소화 "트럼프는 트럼프 최순실은 최순실" 민주·국민의당 변수 최소화 부심

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. 무엇보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.

따라서 야권은 '트럼프 쇼크'와 최순실 사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박 대통령이 총리 추천 협상에 앞서 '완전한 2선 후퇴'와 탈당을 약속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. 트럼프 변수를 차단하면서 '최순실 정국'을 더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해석된다.

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"트럼프 변수를 박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으로 다시 복귀하는 명분으로 삼는다면 국민은 더 분노할 것"이라며 "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.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지 않는 민주당의 입장은 바뀐 적 없다"고 마했다.

우상호 원내대표도 "트럼프는 트럼프고 최순실 은 최순실"이라며 "민심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. 12일 집회까지 상황을 보겠다"고 말했다.

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-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"어떤 경우 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위치를 스스로 내려줘야 하 고, 총리의 성격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"면서 "김병 준 총리 내정자의 정리, 박 대통령의 탈당, 영수회 담을 통한 총리 추천, 그리고 새 총리의 조각권 행 사를 일관되게 제안해왔다"고 말했다.

김성식 정책위의장은 "박 대통령이 빨리 2선 후퇴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정국이 가닥이 잡힐 것"이라고 말했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

대통령 퇴진 촉구 국회의원 대토론회

: 순천중앙 **723-7100** 나 주 **334-2727** 영 광 **353-9500** 여수구봉 **642-1400** 

문의

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'대통령 퇴진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대토론회'에 참석한 야당의원들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목포하당 **285-7576** 장 성 **395-0007** 무 안 **454-0099**  순 371-3555 양 383-5811 흥 835-5050

수 683-1800 남 537-3100

## 박 대통령 사퇴·탄핵 여론 60% 넘었다

42%→55%→60%, 갈수록 늘어…20~30대 80% 근접

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(하야)하거나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 야 한다는 의견이 60%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.

CBS 라디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국 수습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리얼미터에 의뢰해실시한 결과, '자진 사퇴하거나 탄핵해야 한다'는 의견이 10명중 6명 이상인 60.4%로 조사됐다.

반면, '새누리당 탈당 및 여야 합의 총리에 국정이양' 의견은 18.4%, '박 대통령 또는 김병준 중심으로 국정 정상화' 의견은 14.1%로 집계됐다.

박 대통령이 제1차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던 지난 10월25일 조사에서는 '자진 사퇴 및 탄핵' 의견 이 42.3%, 최순실씨가 긴급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았 던 11월2일 조사에서는 55.3%로 10%p, 이번 9일 조사에서는 60.4%를 기록하며 지난 달 25일 대비 20% p 가까이 '자신 사퇴 및 탄핵' 여론이 더 늘어났다.

'자진 사퇴 및 탄핵' 의견이 가장 높았던 연령층 은 20대(사퇴·탄핵 78.4%, 탈당·국정이양 8.2%)와 30대(사퇴·탄핵 77.7%, 탈당·국정이양 11.1%) 등 으로 80%에 근접했다.

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(15%), 스마트폰앱(38%), 유선(18%)·무선(29%) 자동응답 혼용, 무선전화(82%)와 유선전화(18%) 병행방법으로 조사했고, 응답률은 11.4%이며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4.2%p다. 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#### 트럼프 쇼크에 '임종룡 원포인트 인사청문' 열까

### 새누리 "경제 수장 빨리 임명해야" 민주당 "현 상황 고려 단계 아니다" 국민의당 일부 분리 추진 의견도

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 경제의 불확 실성을 키우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임종룡 경제부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 청문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.

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'트럼프리스크'가 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당장 가시화될수 있다며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은 뒤로 미루더라도 원-포인트 인사청문회라도 개최, 경제부총리를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

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새로 임 명되는 총리에게 내각 구성 문제를 맡길 수밖에 없 어 입장이 애매하다. 내부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 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임 내정자 문제를 전 향적으로 처리한다면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.

반면, 야권은 여권이 제기하는 '임종룡 원-포인 트 인사청문'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.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권의 국정 정상화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.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"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임 부총리 인사청문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"고 선을 그었다.

하지만, 야권 내부의 고민도 크다. 경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공백을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.

이를 반영하듯, 국민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임 종룡 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분리 추진해 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.

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지난 7일 "유일호 경 제부총리가 계속하든 임 후보자를 앉히든 정리를 빨리해야 한다"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.

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9일 야 3 당 대표 회담에서 이를 의제로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. 박 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"당시 회담에서 임종룡 후보자를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추미에 민주당 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"고 밝혔다. 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#### "국민에 심려 끼쳐 죄송"…박승주 국민안전처장관 내정자 자진 사퇴

박승주(64·영광 출신)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

지난 9일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. 박 내정자는 이날 밤 9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"오늘 안전처 장관 내정자의 지 위를 내려놓겠다"며 "모든 것을 내려놓고 청소년 인성진흥 등 사회를 위한 활동들로 돌아가겠다"고

박 내정자는 지난 2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추천으로 함께 안전처 장관에 내정된 지 1주 만에

말했다.

각종 논란으로 낙마하게 됐다.

그는 굿판 논란과 관련해 "천제 재연 문화행사에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"며 "종교나 무속행사라고 생각했으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"이라고 해명했다.

박사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"본의 아니게 연구 원 박사의 논문내용과 겹치고 인용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 다"고 말했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